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

전북도, 꽃과 수변 어우러진 지방정원 조성 박차 불거리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관광 산업화 견인

전북도는 수목과 꽃의 생태적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는 GDP 3만불 이상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정원산업은 단순한 불거리 제공을 떠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사카정원박람회(1990년) 이후 일어난 가드닝붐으로 현재 3700만명이 정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국내만 해도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이후 한해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2017년

부안 수상정원 조성사업(2020년 완공)을 시작으로,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2021년 완공)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0년에는 남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원조성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우선, 부안 신운천 생태하천 일원에 조성 중인 수상정원은 2017년부터 총사업비 60억원 규모로 201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내년 사업비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계획대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수상정원이 완공되면 2023년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행사 시 수생·습지식물을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추진

2년 차인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은 옥정호 상류 맑은 물이 빙 돌아 흐르는 산자락에 총사업비 60억을 투자해 구절초를 비롯한 다양한 들꽃, 사계 정원 등 5개의 테마정원과 생태연못, 수변 데크,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1년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후,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도 환경복지국장은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어 개인의 취미를 넘어 정원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원을 기쁘고 즐기는 가드닝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진영(오른쪽 다섯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공공행정혁신 장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각국 행정장관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아세안 행정장관회의 폐막... 행정혁신 협력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10개국 행정장관들이 각국의 행정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행정 혁신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19 한-아세안 공공행정 혁신 행정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해 25~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로.

각국 대표단과 아세안 출신 연수 공무원 등 150여 명은 ‘보다 나은 거버넌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디지털 정부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디지털 정부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디지털 정부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디지털 정부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디지털 정부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디지털 정부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공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라는 대주제와 ‘국민 참여, 디지털 정부, 지역 발전’의 3가지 소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 참여 세션에서는 국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처리해 신뢰도를 높인 ‘국가공공서비스 민원관리 시스템’(SPIN-LAFOR) 등이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지역혁신 세션에서는 진영 행정부 장관이 ‘지치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경제 성장을 정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지역소멸 위기 문제의 해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3P(사람·상생·평화)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우리의 우수 공공행정과 아세안 국가의 혁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행정 분야 상생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뉴스스

정부, 내년 재난안전 R&D에 1236억 투자키로

정부가 내년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R&D)에 123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2020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1043억원보다 18.5%(193억원) 증액된 것이다.

기관별로는 행안부가 6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경찰청은 225억원(21% 증액), 해경청은 199억원(10% 증액), 소방청은 158억원(9% 증액)이다.

R&D 과제별로는 행안부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 조기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발(7억원),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연구(8억원), 챗봇(chatbot)을 이용한 안전신고기술 개발(6억원), 지역별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지능형 플랫폼 개발(10억원), 대규모 재난대피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8억원), 법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기준 분석기술 개발(3억원) 등 43개 신규과제에 239억원을 투자한다.

경찰청은 안전한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지원 장비 개발(11억5000만원),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플랫폼 개발(11억 8800만원), 경찰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실감형 가상훈련 프로그램 개발(5억 9500만원) 등 3개 신규과제에 29억원을

투자한다. 해경청은 수상구조사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11억5700만원), 위성기반 선박모니터링 및 불법 활동 선박 탐지 체계 개발(9억원), 해난사고 초기 대응용 수중유류 이적기술 개발(4억5000만원) 등 5개 신규과제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소방청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동 소화시스템 기술개발(10억원), 소방시설 전 생애관리플랫폼 개발(9억8000만원), 전기차량용 사고현장 소방진급대응 기술개발(3억원) 등 5개 신규과제에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R&D 수행을 원하는 산·학·연 연구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갖는다. /뉴스스

전북도, 국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대상지 조사

전북도는 수질개선훈련이 필요한 저수지를 조사하여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 저수지’란 저수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되면 5년 이내에 수질개선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도내 저수지 중 총 저수량 1천만㎡ 이상 또는 오염정도가 생활환경기준 IV등급(농업용), III등급(생활)을 초과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중점관리저수지 제도를 각 시·군 및 농어촌공사 등에 홍보하고 적극적인 대상지 발굴을 요청했다.

도는 시·군에 대규모 저수지 주변 개발로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저수지 수질이 생활용수, 농업용수로서 기능하기 어려워 뿐 아니라 악취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수질개선훈련이 필요한 저수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저수지 중 주민 활용성 및 접근성이 우수한 전주 아중저수지, 군산 은파저수지, 김제 금평저수지 등은 수변

휴양 기능이 가능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도내 민수위 면적 50만㎡ 이상 16개 저수지에 대한 ‘호소 환경 및 생물다양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도 상류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관리와 생태계 보전과 연계한 대상지를 요청했다.

도는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12월 13일까지 환경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0년 하반기에 중점관리 저수지 대상지를 최종 지정하게 된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온실가스 감축 위한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2020년부터 5만 원 이상해 최대 1가구당 1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가 등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도 전체 세대수(806천세대)의 약 27%(215천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시·도 중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4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가 1년에 2회(상·하반기) 지급되는데, 과거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최대 7만원(반기별 3.5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결과(2019년 6월 지급) 약 4만4000세대에 총 5억5000만원(세대당 약 1만3000원)이 지급됐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2천톤CO2에 달한다.

도는 2020년부터 인센티브를 5만원 증액해 최대 10만원(반기별 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홈페이지(www.qpoint.or.kr) 또는 시·군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의 탄소포인트제 시행 대상이 가정·상가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